

“5·18, 초·중·고 교과서 수록 확실한 방안 마련하라”



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尹 “5월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더니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삭제 민주당 “5·18 지우기 용납 못해” ... 국회의원 58명 “민주주의 후퇴”

교육부가 2022년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광주일보 1월 4일자 6면)을 두고 지역 민심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야가 책임론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 “5월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이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정 교육과정의 재고시 등 5·18 민주화운동이 초·중·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 국민 통합의 길을 열고 협치의 실마리를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40년이 지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할 사실상 유일한 창구인 교과서 등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복원군 개입설을 제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 있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흑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논란과 관련,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정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5·18 민주화 운동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 여당

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문제인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냈다. 당장, 대통령실은 2022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 서술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날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대신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하도록 명시했다”며 “5·18은 '민주화 운동 과정'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5·18 내용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극의 수석대변인은 “문제인 정부의 유은혜

교육부장관 시절 마련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간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이 정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민통합과 협치의 단초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교육과정의 6·25 서술에서 ‘남침’ 표현을 뺐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넣은 바 있다. 이미 공시가 됐다가 재공시가 어렵다면 연말까지 이뤄지는 ‘교과용 도서 편찬준거’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5·18 민주화운동이 여야의 협치를 넘어 국민통합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 탐지 체계 구축 '드론킬러' 개발·스텔스무인기 연내생산

아파치 전진배치 등 작전 보완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대응책으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해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촘촘히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방공망 허점 보완안으로 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격과 방어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 등에 따라 공세적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드론부대가 사령부 형태로 꾸려지는 것이다.

이 사령부와 관할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인원과 이들 군의 전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군에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실제 올해 안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또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군은 구체적 확보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예산과 전력화 시점 등을 고려해서 대동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충격 발사,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 체계를 말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기
광주일보 창간 71주년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 종이신문의 페이지 넘김을 형상화 시킨 디자인으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듯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았다.

에너지 이용권 단가 인상
14만5000→15만2000원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가 올라간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년 가정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를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출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